이재명 "안보·민생경제 위기 돌파 영수회담 열자"

민주당 대표 신년 회견…"안보 참사로 '코리아 리스크' 전면화"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내각 쇄신 등 경제 위기 '3대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을 언급한 것에는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의 긴장만 고조시키는 일이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말살 책동도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을 두고도 "검찰의 영장 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 복원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3대 해법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이다.

내각 쇄신과 관련해서는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법 개정과 관련,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역할과 대해선 "집권여당의 폭주, 무도함, 반 국민적 행태들을 견제하는 일이 첫째이고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그 성과로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 질문에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게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檢, 답 정해놓고 수사"…여 "서면 진술서로 진술 거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공방

12일 여야는 전날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를 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 투사 행세를 하더니, 정작 검찰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로 행동했다"며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말했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이 대표가 A4 용지 10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수사 내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 조사에서 소명한 것보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훨씬 많았다"면서 "이 대표는 유체이탈 검찰 조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안의 수사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인 터라 검찰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이 대표 엄호에 더욱 힘을 모으는 모양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야당 총수를 이렇게 불러내 구속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주기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을 향해 '방탄 국회'라는 비난이 쏠리게 하는 용도로 실제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사안 자체로만 보면 영장 청구가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검찰이 사실상 답을 정해 놓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송갑석(서구갑)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이 대표를) 소환하고, 법 적용을 한 상황에서 (이 대표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검찰 입장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개인의 문제인 만큼 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80조 적용 시 이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해도 되는지를 두고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법안 발의

신정훈 의원 "지역 성장동력 될 것"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은 12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각각 발의했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 년도 기준 1704 개 기업의 입주와 20 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냈다. 이에 추가적인 지방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농어촌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 집적지역이다 . 또 수산물 생산량 (59 %) 과 생산액 (39%) 이 전국 1 위지만 , 해양수산 공공 · 유관기관은 주로 수도권 (11 개) 에 집중되어 있으며 , 전남엔 단 1 개 뿐인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농도 전남' 에 농협 본사를 이전한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일으켜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 출신 김가람, 국힘 청년최고위원 출마

광주 출신 김가람(39) 전국청년회의소(JC) 67대 중앙회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했다.

김 후보는 12일 국회에서 전국 각지의 청년 300여명이 참석한 출마선언식을 열고 "1%의 가능성을 100%로 만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라 힘들 것이라는 편견을 깨부수고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에 당당히 당선되어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날 안현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은 "청년최고위원 선거가 청년당원들의 축제가 아닌, 기득권들의 밥그릇 싸움이 되었다" 며 45세 미만 투표 제도 복원을 주장했다.

김 후보도 "청년최고위원은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며, "청년최고위원을 청년당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청년국 설치, 3대개혁 추진 청년 TF 구성, 지역균형발전위 산하 청년 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기획위원, 제20대 대선 윤석열 캠프 전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시당 미래세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약 10년 전부터 꾸준히 보수정당에서 정당 활동을 이어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경매,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